

蒸發 위기의 開放大學 體制

金 昇 漢
(韓國放通大 平生敎育研究所長)

1. 緒 言

1981년 12월 31일자로 공포·시행된 改正敎育法(법률 제 3,525호)에 의해 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 이듬해인 1982년 2월 15일 서울의 京畿工業開放大學의 개교로 이 나라에 처음 등장했던 이른바 개방대학 제도는 그 뒤 6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國立과 私立을 합해 6개의 개방대학을 거느리는 이 나라 교육제도상의 새로운 시도로서 세인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모든 개방대학들은 1987년 3월부터 일제히 그 校名에서 '開放'이라는 이름을 떼어 버리고 단순히 産業大學, 工業大學, 經商大學 등 극히 평범한 학명을 가진 일반대학으로 變身(?)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이 나라에 도처럼 도입됐던 이른바 개방대학 제도는 사실상 蒸發하고 말

았다.

이른바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이란 명칭을 단 산업 기술 연마 위주의 고등교육 기관이 이 나라에 도입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 보면 그 자체가 석연치 않은 데가 적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目的과 그 位相 등을 정해 놓은 敎育法上的 명문 규정(제 128조의 6; 제 128조의 7; 제 128조의 9; 제 128조의 10 등)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분명히 그러한 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 기관들이 일제히 '개방'이라는 명칭을 떼어버리고, 마치 일반대학과 동일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전환한 것같은 인상을 주는 교명 변경을 문교당국이 허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敎育史上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일대 이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

급격한 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고도 산업화의 추세가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 산업 기술 교육 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하나의 示範的인 敎育機關을 그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교육 기관의 존재 자체를 구차스런 이유를 내세워 부인해 버린 처사란 점에서 단순한 이변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敎育史上 씻지 못할 不解事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래 개방대학 학생들의 집단 시위에서 비롯된 개방대학 명칭의 폐기 요구는 표면상 나름대로의 구실이 없지 않았다. 개방대학이라는 명칭이 생소하여 산업계나 일반 국민 가운데 이 大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식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大學의 一員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롯하여 이 대학 졸업자의 일반대학

에의 편입학 자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대학의 입학 자격으로 일정한 연한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 등이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가 이 나라에 모처럼 도입된 이른바 개방대학 제도를 사실상 소멸시키는 타당한 명분이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선 개방대학에 대한 산업계나 일반 국민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전족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弘報와 개방대학 제도 자체의 質的 發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질적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처사가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대학 졸업자의 일반대학 편입학 제한 조치만 하더라도 그것은 이른바 卒業定員制에 묶여 있던 당시 大學들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파생한 문제이지, 졸업 정원이 폐지된 오늘에 있어서는 관계 대통령령의 조문 1개 조항을 바꿈으로써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가? 또 개방대학이 일정 연한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입학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開放大學의 특수한 設立目的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요청으로서 그것을 폐지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教育法 제128조의 6항에 개방대학은 일정한 학교 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明示된 바와 같이 이 대학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일정한 학교 교육(高等學校·專門大學·大學)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주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들에게 오늘의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최신의 정보와 산업 기술의 연마(前記 引用 法 條 文 中 “학술의…연구” 云云은 같은 조항의 放送通信大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순리적인 법 해석일 것이다)를 위한 再教育(recurrent education) 또는 繼續教育(continuing education)의 기회를 주려는 데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개방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그 교명에 붙은 ‘개방’이라는 명칭을 배척하고, 입학 자격에 있어서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산업체 근무 경력 조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 대학 설립의 근본 목적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일 이 대학의 입학 자격 요건을 일반대학과 똑같은 것으로 완화한다면,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들보다는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학생들이 그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정작 현직 근로자들의 취학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방대학을 관리하는 학장이나 설립자들이 교명에서 개방이라는 명칭을 떼어 버렸다 해서 개방대학 설립의 원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들은 비록 입학허가 자격에서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우선 입학이 보장되는 加算制를 실시할 것이며, 교과과정의 운영 방식을 보더라도 이 大學에서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晝日制와 定時制 및 季節制 등 특수성이 溫存되며, 학생 등록금 역시 학점 단위의 공납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개방대학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개방’이라는 명칭은 떼어 버렸으나 이 대학의 행정 조직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產學協力課, 實驗實習課, 敎科開發課 등 특수한 하부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개방대학이 원래 기도했던 산업 기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이 ‘개방’이라는 명칭을 제거함으로써 노리고 있는 실제적인 목적은 직업 기술의 연마를 위한 재교육·계속교육 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직업 기술의 실재와는 거리가 있는 일반대학의 인문·사회계 학과까지를 병설한 사실상의 一般大學化에의 길을 열자는 것임을 의심할 여지

가 없는 것이다.

개방대학 제도의 이같은 변질은 그러나 이 대학 관리자들에 叙上한 바와 같은 학교 경영상의 편리주의나 개방대학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불이익을 가급적 감축하려는 몸부림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기까지의 문교 당국자 자신들의 석연치 않은 動機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한 졸속주의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필자는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이하에 그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석연치 않은 誕生 經緯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방대학 설립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釜斗煥씨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新軍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직후 단행한 1980년 7월 30일의 ‘教育改革措置’의 부산물격이라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신군부 세력들이 社會淨化 시책의 일환으로 취한 ‘7·30 교육 개혁 조치’는 과외 수업의 폐지와 대학의 졸업 정원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生體實驗的 난도질이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과열 과외 공부의 만연에 따르는 社會的 違和感을 해소하고, 대학 입학의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하여 재수생의 누적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되도록 해소해 보려는 政治的 動機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개혁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장 나타난 것이 졸업 정원제에 따른 탈락생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7·30 조치로 시행된 대학의 졸업 정원제는 입학 정원을 졸업 정원의 130%로 했기 때문에 각 대학은 종전처럼 전문대학 졸업자와 대학 중퇴자의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는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문교부의 産業教育局은 외국, 특히 日本과 台灣과 같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위 技術大學(institute of technology) 같은 것을 참조로 하여 그와 비슷한 교육 제도로서 ○○산업대학을 설립하자는 案을 제1차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리하여 이러한 산업대학 설치 시안은 그 구체적인 심의 단계에서 때마침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平生教育의 개념과 결부되어 기이하게도 그 교명을 산업대학이라는 이름 대신 개방대학이라는 英國의 放送通信 교육 기관인 open university에서 따오게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무엇보다도 개념상 혼돈의 素地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대학의 설립 구상은 엉뚱하게도 新軍部 세력의 民心 수습이

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교육 시책, 즉 대학의 졸업 정원제 실시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때마침 대두한 平生教育의 理念的 基調를 뒷받침으로, 대학 탈락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 및 중·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직장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도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잉거주출한 신종 교육 기관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열려진 교육 기관(open educational institution)으로서의 개방제 고등교육 기관(op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임을 표방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오늘의 개방제 고등교육 기관이란 그 특색으로 진로 지도 교육 강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경제적·연령적 또는 취직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者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수준과 과정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산업 사회의 요구에 직접 부응할 수 있는 증견 직업인의 양성을 기하고, 일반적으로 成人教育·社會教育의 制度化를 실현함으로써 평생교육 체제의 실현을 기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영국 서리大學校 루이스 엘튼教授의 말과 같이, 개방제 고등교육이란 대학 입학 자격의 개방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는 이른바 통로 과정(access courses)의 개방, 그

1) 文敎部 産業教育局, “開放大學 設立 計劃(案)”, 1981.5, p. 3.

리고 경제적으로는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정 보조의 길의 개방, 일과 공부와의 연결 장치의 개방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야만 비로소 참다운 開放制 高等教育機關²⁾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뚜렷한 설립 목적을 가진 개방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1980년 당시 설립된 지 이미 8년째가 되는 韓國放送通信大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그 당시의 문교부 장관이었던 李奎浩씨는 물론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분이었으며, 그때 문교부에서 開放大學 설립 계획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전문 학자들간에도 문교부가 신설하려는 開放大學과 기존의 韓國放送通信大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産業技術大學(institute of technology) 또는 폴리테크닉(polytechnic: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더 상술하기로 한다)이라 해야 할 이 새로운 교육 기관의 명칭을 엉뚱하게도 개방대학이라 붙이고, 그 유래를 英國의 放送通信大學인 open university에서 따오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점이 필자의 견해로서는 개방대학 설립 경위에 얽힌 석연치 않은 첫번째 수수께끼인 것이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단서는 앞서 인용한 權彥鍾씨의 저서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權彥鍾씨의 저서에 의하면, 개방대학 설치를 위한 「各國 開放大學 比較研究」⁴⁾를 담당한 3인의 교육학자들은 1981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5개월간 문헌 연구와 각국의 순방 결과물을 종합하여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frame of reference를 引用했던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즉 이들은 이 짧은 기간에 뉴질랜드, 덴마크, 서독, 오스트렐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의 遠隔教育大學 등 開放制 高等教育機關 및 사회교육 기관 등을 시찰하여 그 사회적 배경 조직 및 제정, 교육 대상, 학제, 교수 및 학습 방법, 평가 방식 등을 비교하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각국마다 다른 각종 사회교육 제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현실적인 차이점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문교부는 그 당시의 정치적 당면 과제를 조급하게 해결하려는 목적 때문에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개방대학 제도를 발족시킨 흔적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1970년대에 문교부가 실시

한 소위 '高等學校의 平準化 施策'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계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韓國放送通信大學이라는 새로운 교육 기관을 발족시킴으로써 본래는 고등교육의 大衆化 추세에 따르는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정선된 교육 매체의 통합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해야 할 사명을 띠고 탄생한 이른바 '第三世代大學(l'université pour troisieme âge)'으로서의 이 大學(한국방송통신대학)을 제대로 育成시키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른 前轍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 사회의 급속한 고도 산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기술 교육 기관으로서 기존의 일반대학과는 판이하게 다른 위상을 설정하여야 할 이 나라 개방대학 제도가 그 발족의 原點에서부터 그 당시의 정치적 경제에 좌우되고, 외국의 同種 산업 기술 교육 기관과의 frame of reference를 설정함에 있어 전혀 엉뚱한 連鎖를 맺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이 제도 도입의 원래 목적과는 상치되는 방향으로의 왜곡된 운영을 면치 못하게 했던 것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개방대학 제도가 발족 후 6년여만에 空中分解되었다고 할까, 行方不明이 될 수밖에 없었던 수수께끼의 두번째 이유는 바로

2) 金昇漢, 開放制 高等教育과 遠隔教育, 正民社, 1985, p.30.

3) 權彥鍾, 開放大學—개방대학이란, 正民社, 1983, pp.84~90.

4) 權彥鍾, *op. cit.*, p.72.

이러한 언저리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개방대학은 開放大學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개방대학이 ‘開放大學’이라는 독특한 성격과 교육 체제를 통틀어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방대학이 아님은 韓國의 개방대학 설립을 준비했던 교육 전문가의 한 사람인 金水日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그는 “개방대학은 英國의 open university를 번역한 용어로서 연령·성별·학력에 관계없이 청소년 및 성인들 중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學位 및 非學位課程으로 구분·실시하여, 제 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⁵⁾라고 규정하고, 이 大學의 “교육 방법은 郵便通信, 라디오 放送, TV 放映, 對面學習, 個別相談 등이다”⁶⁾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개방대학은 그 모형을 英國에서 찾은 한, 金水日이 지적한 대로 英國의 open university, 즉 韓國에도 이미 存在하는 韓國放送通信大學이지, 어느모로 보거나 理工系統의 교육 미비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본격적 사회교육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시험적으로 설립하려는”⁷⁾ 京畿工業開放大學의 명칭으로는 처음부터 부적합했었다. 더욱이 李茂根의 분석과 평가에 의하면, 韓國의 개방대학은 “근본적으로 憲法 第29條(現行憲法 第31條: 筆者註)에 명시된 평생교육 이념에 바탕을 갖는데, 그 역할은 다음 몇 가지...”라고 부연하면서 그 주된 기능이 職業技術教育의 革新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개방대학은 이름은 ‘개방대학’이라 붙였지만, 그 설립의 주목적은 ‘① 산업 사회의 요구에 기초한 직업 기술 교육의 실시, ② 진학 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대학(職業技術) 교육의 활성화, ③ 인문·사회 분야의 放送通信大學에 대응하는 직업 기술 교육 분야의 방송 등’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개방대학들은 애당초부터 혼동의 여지가 있는 英國의 open university에서 그 이름을 빌려 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면에서 자신들과 유사점이 많은 英國의 polytechnics를 우리 말로 醇化한 產業技術大學으로 명명했어야 옳았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중등교육을 마친 사람이 계속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第3段階(tertiary) 교육 기관

으로서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공통적 추세라 할 수 있다. 英國式으로는 university, college 혹은 the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polytechnics 등이 바로 그런 구분들이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상으로는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역시 일반대학, 전문대학 그밖의 고등교육 기관(放送通信大學, 開放大學, 大學 정도의 各種學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類型的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모두 post-secondary advanced education(중등교육 수료 이후의 고급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설립 목적(purpose), 관리 운영 형태(governance), 재정 원천(sources of funds), 학생 공급원의 성격(sources of student fees), 가맹 전국 조직(national representation), 관심 범위(range of interests), 교과과정 내용(course contents), 교수·학습 체계(teaching and learning), 연구 및 대학원 과정(research and post-graduate study), 입학 자격(student access), 교수 조직(staffing), 건물과 시설(buildings and equipments), 외부 기관과의 관계(external relations) 등 적어도 13가지 항목

5) 金水日, 世界 主要國家의 開放大學 比較研究(第一文化社, 1981), p.9(李茂根, 專門大學 教育論(培英社, 1985), p.228에서 再引用).

6) *Ibid.*

7) 李茂根, 전계서, p.231.

8) 李茂根, 전계서, pp.231~232.

에서 각기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4. 폴리테크닉스로서의 開放大學의 特性

英國 런던市에 있는 킹스톤 폴리테크닉스(産業技術大學)의 副學長 알란 매터슨(Alan Matterson)이 앞서 제시한 13개 항목에 걸친 특성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① 설립 목적, ② 대학의 관심 범위, ③ 교과과정 내용, ④ 교수·학습 체계, ⑤ 교수 조직, ⑥ 외부 기관과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스는 그 設立 目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판이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일반대학이 그 나라, 그 시대 최고 수준의 학문 발전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學者를 양성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인 데 반하여, 폴리테크닉스는 여러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그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전문 직업, 산업 기술과 상공 업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하며, 여기서 행해지는 연구나 학자 양성도 그 주목적은 이 대학 특유의 교수 체계를 향상시키고 지원하는 데 국한되어야지 일반대학에서처럼 연구 그 자체가 주요 활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스는 그 關心 領域이랄까 범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대학의 주

요 관심 영역은 비록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醫學, 齒醫學, 獸醫學에 관한 수준 높은 교수를 하는 데 있으므로 창조 예술이나 연극, 교육 분야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이런 실무 중심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일반대학은 학위를 주는 일이 없다. 이에 반하여 폴리테크닉스는 창조 예술이나 연극 부문 또는 보조 의학 분야의 코스에 대해서도 학위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세째는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의 교과 내용은 그 성격이 판이하다. 다시 말해, 일반대학의 교과과정은 자체적인 검토와 外部의 시험 감독관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도록 대학 이사회가 자주적으로 결정되되, 그 교과 내용의 수준은 개개 학생이 단일 학문 분야를 심도있게 공부하게 하는 데만 중점을 둔다. 이에 반하여 폴리테크닉의 교과 내용은 그러한 고등교육 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외부 기관(산업체, 국가의 산업 기술 훈련 기관 등)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폴리테크닉의 교과과정의 성격은 學際的인 學習(inter-disciplinary study), 問題解決 中心 學習(problem-solving learning), 졸업 후의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고려된 내용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네째는 教授·學習 體系上的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일반대학이 전통적 面對面수업 위주의 체계라 한다면, 폴리테크닉

의 그것은 제도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을 돕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 서비스가 행해지고 최신의 교육 방법 도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다.

다섯째는 教授 組織인데, 일반대학의 교수는 특정 분야에 관한 專門家 또는 研究者로서 국내·외의 명망이 높은 학자가 주축인 데 반해, 폴리테크닉의 교수진은 어느 특정 분야에 관한 교사 또는 전문가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산업체, 상공업계, 그밖의 전문 직업 영역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교원 중 상급 직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30% 정도이며, 연령상으로도 태반이 5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층이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은 각기 외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다. 前者는 하급 교육 기관(교사 양성 기관 포함), 산업체, 상공업계, 기타의 전문 직업 단체와 연구상 필요한 접촉 이외에는 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이와는 반대로 後者는 하급 교육 기관이나 산업체 등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리하여 폴리테크닉은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급 과정의 직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기도 하고, 학회의 공공 도서관 등 서비스 기관 및 해외 기관과의 形式的·非形式的의 유대 관계도 갖는다.

이처럼 일반대학과는 판이한

성격을 가진 폴리테크닉은 ① 학생의 구성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 ② 산학협동 체계의 활용, ③ 입학과 졸업 제도, ④ 학위 및 자격증 수여 제도, ⑤ 재정과 경리 체계, ⑥ 교수 조직 등에 있어 독자성을 갖는 것을 그 생명으로 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기관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개방대학 설치 준비 단계에서 관계자들이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택한 日本의 産業科學大學(institute of technology 또는 technical university), 台灣의 工業技術學院(Taiwan institute of technology) 등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나라의 개방대학들이 애당초 그 명칭에 '開放'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한 바와 같은 英國式 명칭인 폴리테크닉이나 産業技術大學이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이러한 유형의 신종 고등교육 기관에 걸맞는 체제 구축을 위해 전력 부구를 했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目擊한 개방대학 체제의 蒸蒸日上인 行方不測이니 하는 사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아니었던가 사료된다.

5. 結 語

오늘날 한국의 개방대학들은 그 교명으로부터 '開放'이라는 명칭의 제거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또 그 입학 자격 요건으로서의 '1년 이상 산업체 근로 경력 소지자'라는 제한 규정마저 제거함으로써 모처럼 도입했던 새로운 형태의 산업 기

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퇴색시키고, 여러 면에서 一般大學化에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1년 소위 新軍部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對國民 弘擧事業으로 성급하게 발족시켰던 이른바 개방대학 제도는 애당초부터 그 frame of reference의 잘못과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기술 고등교육 기관을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키우려는 일관된 정책적 노력의 차원으로 이제 이름만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제도 자체의 붕괴를 재촉하는 방향으로 突進하고 있는 것같은 감을 주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오늘의 韓國의 이른바 개방대학 제도가 사실상 行方不測이 된 것같은 상태에 이른 것은 事理의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으나, 그래도 이러한 새 제도를 도입하려던 의도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오늘의 시점에서 적어도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서 새로 개편된 서울産業大學을 위시한 6개 개방대학 後身들이 산업 기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진면목을 찾아야 할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첫째, 이들 대학의 입학 자격 요건으로 막연하게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로 경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학과의 특성에 관련이 있는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 연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입학 허가 제도를 도

입함이 옳을 것이다.

둘째, 이 大學 卒業生의 일반대학 학사 편입의 제도적 억제 조치는 이미 사실상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관계 법령의 개정 조치는 안 된 상태에 있다. 憲法에 평생교육 진흥을 국가 의무로 규정한 우리나라 國基에 비추어 정규의 교육 기관과 그밖의 대안적 교육 기관의 졸업생 신분에 관한 일체의 차별적 규정 등은 此際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됨이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이 産業技術大學의 一般大學化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세째, 모든 開放制 高等教育 機關의 管轄은 문교부의 大學 教育局에 맡길 것이 아니라 文 敎部 산하에 특별 기구를 두어 이 기구의 구성원에 문교부의 관계관뿐만 아니라 商工部, 科學技術處, 勞働部, 遞信部 등 産業 技術 發展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을 광범하게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산학협동 체계의 발전을 기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네째, 교과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과 그 내용을 학문 지향적인 것보다는 실제 산업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들 신종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진은 관련 현행 教育公務員法에 얽매이기보다는 산업체에 직접 종사하여 지도적 役割을 하고 있는 현장 기술자를 되도록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독특한 교수 인사 제도의 選擇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成人을 주 대상으로 하는 代案的 高等教育機關으로서의 특성에 비추어 성인 학습자에 맞는 교수·학습 체제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유일한 개방제 고등교육 기관인 현존 韓國放送通信大學과의 共助 體制(예컨대 교양과정 교육의 공동 실시 등)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실한 대응책 강구만이 지금 空中分解 직전의 위기에 있는 이 나라 '開放大學' 제도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아닐까 筆者는 생각하는 것이다.*